

# 6월 국회 이번엔 권성동 방탄국회?

### 한국당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여야 3당 반발 민주 "진정성 증명 하려면 후반기 의장단 선출해야"

여야는 29일 6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방탄국회'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현안 처리 등의 이유로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은 2월, 4월, 6월, 8월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위 법인 헌법은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소속 의원 111명의 서명을 받아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고, 다음 달 1일부터 6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권성동 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도록 한 불체포특권을 염두에 둔 임시국회 소집이라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20대 전반기 국회 임기가 이날 종료되면서 후반기 의원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권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분회의가 열릴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한국당을 공격했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전날 오후 분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은 분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간 내 처리가 안 되면 그 이후 첫 분회의에 상정·표결해야 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권 의원 체포

동의안이 분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2시20분께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 시점에 한국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은 권 의원을 대한민국 사법체계로부터 도피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당은 국민을 기만하는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당이 6월 국회 소집사유 첫 번째로 후반기 의원 구성을 제시했다"면서 "그렇다면 한국당이 밝힌 대로 6월1일에 분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법상 6월 임시국회 규정을 들어 국회 소집요구는 형식적이라는 논리로 반박했다. 나아가 한국당은 후반기 의원 구성 협상이 완료되는 대로 분회의를 열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자동으로 소집되는 6월 국회에 대해서 '방탄국회' 운운하는 것은 야당에 책임을 돌리기 위한

시도"라면서 "민주당이 합리적인 안으로 원 구성에 합의하자고 하면 언제든지 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야당은 6월 임시국회 소집을 '방탄국회'로 규정, 반박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로 국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방탄국회로 인식될 수 있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평화당 정의 의원모임의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며 방탄국회용이든 용납을 못 한다"고 말했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6월 임시국회는 '권성동 방탄국회'로 생각한다"며 "평화당은 '만약 분회의가 소집된다면 국회의원 특권 내러놓기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안철수·김문수 모두 "단일화 없다"

### 관훈클럽 토론회 참석...가능성 일축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와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가 29일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는 모양새다. 두 후보 간 단일화 기류는 한때 달아오르는 듯했지만, 공식 선거운동 돌입을 목전에 두고 점차 식어가는 분위기다. 급기야 김 후보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단일화는 (안 되는 것으로) 끝났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전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단일화에 대해 "일단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한 것보다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측은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의 '3선 저지'라는 목표 아래 "단일화를 못할 게 없다", "장벽이 없어졌다" 등의 표현으로 단일화 가능성을 띄웠다. 하지만 두 후보는 누가 단일후보로 적합한지, 나아가 박 후보와의 본선 경쟁력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즉 스스로 '박원순 대항'을 자처, 자신으로의 단일화를 주장해왔다. 김 후보는 "누가 확실히 박원순 7년 직패를 청소할 수 있느냐를 놓고 볼 때 저를 보는 눈이 더욱 집중될 수 있다고 보

고 마지막 투표 시 올바른 선택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나아가 김 후보는 "(안 후보는) 저보다는 박원순 후보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꼬집은 데 이어 "안 후보도 '박 후보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으니 둘이 합치면 좋지 않겠냐는 열망을 알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김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낮추는 언급을 내놓았다. 그동안 자신의 '야권 대표' 수라고 간주해온 안 후보는 "결과적으로 한 후보에 많은 지지가 모이면 다른 후보가 깨닫기 양보하는 방식으로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위적인 단일화는 있을 수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선거 초반 자신의 지지율이 김 후보보다 높다는 판단 아래 자신으로의 단일화를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안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자신과 박 후보 간 공통점이 더 많다는 김 후보의 발언과 관련, "박 후보와 김 후보는 모두 과거 후보라며 "과거와 현재가 다르다"는 측면에서 두 사람이 더 공통점이 많다고 반박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국회 개원 70년 자축 정세균 국회의장과 전직 국회의장,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등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0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축하 떡케이크 절단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 의장 "민주주의 기초는 여야 협치" "한국당 국민이 외면...지도부 물러나야"

### 국회 개원 70주년 기념식

국회는 29일 개원 70주년을 맞아 국회 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원 기념식을 열고 70돌 생일을 자축했다. 이날로 임기를 마치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5당 지도부는 한자리에 모여 70년 전 탄생한 제헌국회의 의미를 되새겼다. 정 의장은 "1948년 5월31일 첫걸음을 댄 국회는 때로는 군홧발에 짓밟혔고 때로는 '통법부'라는 오명에 시달리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우리 국민이 울컥해 국회를 지켜줘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 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또 정 의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순항할 수 있었던 건 헌법 정신을 지키려 합심했던 정치권의 헌신 때문이었다"

며 "민주주의 기초는 여야의 협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협치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 국회 상황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축사에서 "개원 70주년이 됐지만 아직도 국회는 국민의 온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던 대통령 개헌안은 투표 불성실로 처리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948년 광복의 환희와 혼돈 속에서 제헌국회가 세워진 이후 국회는 민주주의 본산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국민의 염원인 협치를 이루자"고 역설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정우택 SNS에 글

자유한국당 4선 중진인 정우택 의원은 29일 "우리 당은 경제·사회 질서를 수호할 유일한 수권세력임에도 자기당작에 빠진 모습과 정국오판으로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 관계와 동북아 정세가 송두리째 뒤바뀔 수 있는 외교안보적 급변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당 지도부가 무조건 반대하는 식으로 버려 미래지향적 좌표설정 실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당 지도부는 끝없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당 지지율과 선거전략 부재의 책임을 지고 환골탈태해야 한다"면서 "'백의중군(白衣從軍)'의 자세로 헌신하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발언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홍준표 대표의 '2선 후퇴'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지난 1년여 동안 정치보복에만 집착하면서 나라의 정체성을 뒤 흔들고, 끊임없이 국민을 편 가르며, 경제기반까지 무너뜨리는 실정을 계속했다"면서 "그러나 한국당은 대안세력으로 인정받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중앙권력과 함께 지방권력까지 편향된 이념 세력에게 송두리째 넘겨줌으로써 정권에 대한 건강한 견제는 물론 보수세력의 기반마저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면서 "이러한 절박감을 갖고 당원, 지지자들과 당 지도부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저임금 노동자 보호" vs "거부권 행사"를

### 상여금 최저임금 포함 놓고 민주당-정의당 갈등

그동안 각종 현안에 대해 같은 입장을 보여왔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를 놓고는 갈등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개정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반면 정의당은 '개약'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한정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기본급으로만 규정되면 대체로 정기상여금이 많은 안정적 기업의 소득 4·5분위 고임금 노동자조차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신동근 원내대표는 "일부 야당이 이번 개정안을 두고 '줬다 빼앗는 것'이라고 하는데 근거 없는 과도한 비난"이라며 "실제 최저임금 혜택을 받는 노동자

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100% 얻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극심한 소득격차,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최저임금 노동자와 차상위계층의 저임금 노동자 간의 하향평준화만 만든 꼴이 됐다"며 "집권여당은 반복해서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한 법안이라고 강변하지만 한편에서는 그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합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며 "이 개약된 최저임금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민주당 이수진 전국노동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에 당론으로 찬성한 데 반발해 위원장직을 전격 사퇴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착한보청기협동조합

#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 대통령령 제28838호 농업진흥구역

(2018년 5월 1일 시행 대폭 완화)

###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가능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연평균 6,000만원)

▶ 땅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3,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